

디자인분야를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을 위하여
- 디자인 정책과 산업을 중심으로-

Toward a practical and feasible model of ODA
- in terms of design policy and industry-

2009년 3월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과제 2009

디자인분야를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을 위하여
- 디자인 정책과 산업을 중심으로-

Toward a practical and feasible model of ODA
- in terms of design policy and industry-

2009년 3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목 차

제 1 장 서론 _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_ 1
제2절 연구 방법 _ 3
제3절 연구 기대효과 _ 4
제 2 장 우리나라 ODA 현황 _ 5
제1절 ODA 사업 현황
제2절 ODA 자원 조성
제3절 ODA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제4절 ODA 사업의 문제점
제6절 ODA사업의 개선방향

제3장 디자인 부문 공적개발원조 _ 18

제1절 한국 디자인산업의 현황

제2절 수혜국(受惠國)으로 디자인 부문 공적개발원조

제3절 원조국(援助國)으로 디자인 부문 공적개발원조

제4절 ‘ 마셜 플랜’ 과 디자인

제 4 장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수립_27

제1절 ODA 모델 목표 및 전략

제2절 디자인 부문 ODA 고려 사항

제3절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제 5 장 결론 _ 47

참고 문헌 _ 49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경제력 규모나 확대에 따라 국제협력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영역이 공적개발원조(ODA)분야이다. ODA는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서 각국의 공공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원을 의미한다. ODA의 역사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전반적인 ODA의 감소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원조피로감으로, ODA 시스템 문제 등 공적개발원조에 다양한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읽는 탈무드에서 강조하듯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농사 방법이나 농산물,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전통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원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차이가 적고 차별화된 각국의 독특한 전통문화 분야 계승 발전시키는 디자인 교육과 기술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디자인 부문 통해 교육과 기술훈련으로 공적개발원조를 할 수 있다. 디자인 부문 ODA는 일차적으로는 수혜당사국이 도움을 받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풍부한 디자인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1,300여개의 디자인전문회사 통한 원조는 실질적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적개발원조가 될 것이며, 타 원조국과 차별화 할 수 있다. 나아가 수혜국과의 문화 교류 및 교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ODA 혁신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첫 번째는 ODA의 재원 동원과 배분 그리고 새로운 재원 동원방식에 대한 논의이며, 둘째는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 마지막은 ODA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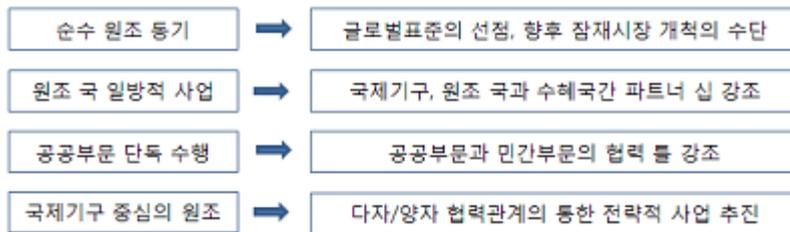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ODA 시스템 논의에서는 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ODA의 경우 매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계획 및 한국국제협력단 무상협력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중장기 국제협력 전략에 근거한 체계적인 ODA 운용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중기재정운용계획(2005~2009)에 따라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ODA 체제 및 관련 정책의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의 발달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정보격차와 문화격차를 낳으면서 기존의 개발 격차나 문화 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국가들 간의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의 앞선 디자인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국내 디자인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디자인 부문 ODA가 필요하며 디자인 부문 ODA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 인정되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ODA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어떻게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수혜국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원조실시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개발 경험과 우수인적자원을 ODA 체계에 반영하여 한국형 ODA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험과 우수한 디자인 인력 배출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부문을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 창출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을 다양하게 발굴·육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인력 인프라와 발전경험을 전파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디자인분야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통한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이 필요하며, 디자인 관련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 지원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이 요구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ODA 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새로운 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부문을 통해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창출을 위해 디자인 산업의 특성, 디자인 정책기조 및 현황분석을 통해 ODA 모형 창출하고자 한다. 모델창출 시 쟁점과 고려사항, 한국 실정에 알맞은 디자인 부문 ODA 모형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ODA 사업 패러다임의 주요 변화

제2절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가, 지역현황, 국가발전전략, 교육정책 등의 자료는 국내에서 수행된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통계 자료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의 국가 개관 및 ODA 현황 관련 정보와 OECD의 원조 관련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였다. 국내 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미비하여 주로 해외 ODA 관련 자료와 인터넷 정보 등을 이용하였다. 둘째, 저개발국가 관련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 및

관련 국제기구 담당자 등과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지원 모델을 확정하고 보완하였다.

디자인 부문을 통해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을 위하여 첫째, 한국 디자인 현황과 정책기조를 문헌으로 분석하고 ODA의 지원체계 상의 문제점으로 체계적 수혜국 선정 기준 분석, ODA 기관 설립, 파트너십, 지원 내용상의 문제, 수요 파악과 사업 선정, 타 사업간 연계성, 사업 내용 등을 사전 연구 분석한다. 둘째, 디자인 ODA 수행 모형 제시를 위해 디자인의 특수성 이해와 디자인 기술 이전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디자인 산업 전망과 한국 디자인 산업 현황분석과 국내 디자인 관련 산업의 인프라 및 파급효과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시를 연구 내용으로 한다. 셋째,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을 위해 핵심 고려 사항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 접근 방법, 수혜국의 기술능력에 따른 차별적 교육 접근법, 제품 수출 연계 모색, 수혜국의 디자인 능력 향상 방법, 국제기구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방향성을 주 연구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ODA 지원 모델을 통해 실행 안이나 실행전략, 수행체계를 제시하며 디자인 부문 ODA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모델 선점을 위한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는 디자인 자문, 초청연수, 인프라 구축 지원, 국제기구협력, 개도국 디자인 인력양성 사업, 단기 디자인 봉사단 파견, 상호문화 교류 등으로 디자인 정책적 지원과 교육 및 산업과 문화를 중심으로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우선적으로 저개발 지역 개발 협력사업 방향결정을 위한 사전 정보 습득과 함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 원조 우선분야를 선정하고, 그 정보를 지역별, 국가별 원조 실행방안 수립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 ODA 사업에 적극 활용됨으로써 저개발국가 인적자원개발 분야 개발협력 기반 구축을 교육 분야 협력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디자인 부문의 특수성을 밑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OD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내 디자인 산업 활성화 및 국제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 풍부한 디자인인력 배출과 1,300여개의 디자인전문회사 통한 원조는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선진 원조국과 차별화로 ODA 사업에 효율성과 국내 디자인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에 등에 디자이너를 파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혜국의 삶의 질 향상과 국내 디자인기업의 진출 교두보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디자인 기술협력 협정 체결 및 협력 분야를 확대 추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전시활동 및 교류 지원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넷째,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우수 디자인 지망생 우리나라 유학을 지원함으로써 디자인 한류를
조성 할 수 있다.

제 2 장 우리나라 ODA 현황

한국에 대한 외국의 무상원조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시작된 이래 한국전쟁이후 경제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로 식료품 등의 진금구호와 물자원조 및 산업설비 투자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후 고도성장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수원국의 위치에 있던 한국이 공여를 시작한 것은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원조자금으로 실시되던 개발도상국 연수생에 대한 기술훈련이 1965년부터 한국 정부자금으로 전환되면서부터이다. 1987년에는 당시 재무부 산하에 유상원조를 전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여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조공여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1991년 외교통상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설립되어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무상의 기술원조 및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해 오고 있다.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는 순공여국로 격상되었고, 1995년 세계은행의 개발차관 공여대상국으로부터 제외되고, 2000년부터 OECD/DAC가 분류하는 국가분류에서 ODA의 대상이 되는 PART I 그룹의 국가군으로부터 제외되어 PART II 그룹으로 공식 이전되었다.

이처럼 원조를 받던 개도국이 빈곤을 퇴치하고 공여국으로 변모한 것은 한국이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로 꼽히며 원조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수원국이 경제개발을 거쳐 어느새 세계 20위권의 공여국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에서 ODA의 바람직한 역할모델로서도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제1절 ODA 사업 현황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개발원조, 해외원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개도국 개발지원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글로벌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인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에 세계 90여 개국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교육, 인력개발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정보화지원 및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06년 기준 총 417억 규모의 국제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한 30개 회원국 중 29위로 ODA비율이이 그 규모면에서 경제력이나 국제사회의 기대수준과는 달리 하위권에 속해 있다.

표 1] 우리나라 연도별 ODA 지원 현황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ODA총계	278.8	365.9	423.3	752.3	446.7

양자간 원조	206.8	245.2	330.3	463.3	365.6
-무상원조	66.7	145.5	212.1	318.0	248.5
-유상원조	140.1	99.7	118.7	145.3	117.1
다자간원조	72.0	120.7	92.6	289.0	81.1
ODA/GNI(%)	0.06	0.06	0.06	0.10	0.05
양자간원조 중 무상원조 비중(%)	32.2	59.3	64.1	68.6	68.0

표 1] 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ODA의 연간 규모는 1993년 1억 달러를 넘어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다자간 원조가 확대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02년 2억 7,888만 달러, 2003년 3억 3,390만 달러로 증가하고 2004년도 말 현재 한국의 ODA는 4억 불을 넘어섰을 만큼 규모 자체로는 DAC 회원국들인 그리스(3.62억불), 포르투갈(3.20억불) 등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저조하다. 국민총생산(GNI)대비 ODA 규모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0.25%의 4분의 1수준인 0.06%이고, UN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양적 목표 0.7%의 10분의 1 수준이다. GNI 대비 비율로도 DAC 회원국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최하위이며,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0.25%), 네델란드(0.7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에선 잘 하지 않는 ‘유상원조’의 경우 절반도 소유되지 않아 실제 결산 비율은 0.07%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양자 간 원조에서 제공된 무상원조 대 유상원조의 비율이 약 32:68인데,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이드라인이나 UN 등 각종 개발문서에서는 전액을 무상원조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발원조위원회(DAC) 전체 평균 97.7%가 무상원조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아 무상원조 비율은 미비한 편이다. 향후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ODA 규모 특히, 무상원조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실질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OECD내 DAC회원국이 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 현재의 GNI 대비 ODA의 비율을 낮아도 0.1%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표 2] OECD 회원국별 ODA 현황 ‘05년 기준

국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한국
ODA/GNI	0.22	0.47	0.28	0.34	0.36	0.47	0.81	0.82	0.94	0.17	0.21	0.27	0.06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질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해외원조, 구호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유엔세천년개발계획(MDG) 등 소극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대한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과 공적개발원조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사업 확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사업으로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ODA에 대한 긍정적 역할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아무리 광고해도 브랜드 제고가 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국가 브랜드 제고도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ODA 자금이 국내 총생산(GDP) 대비 0.07% 정도에 이른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또는 3/1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2015년까지 3배 늘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소득 2만 달러의 경제부국인데도, 공적원조가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은 국가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최근 국가 브랜드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별도로 국제봉사단을 구성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디자인 부문 기술지원과 지속적 교육 훈련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등의 봉사단체를 만들어 인류가 공유하자는 여론이 필요하다.

제2절 ODA 재원 조성

우리나라 ODA 재원은 무상원조의 경우 정부 출연금, 자체수입, 예비비,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구성된다. 무상원조 정부 출연금은 1991년 시작된 이래 총 7332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00년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상원조국의 국가별 지원비중을 보면, 베트남(680만불), 인도네시아(500만불), 필리핀(463만불), 중국(430만불) 등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68%)이 대부분의 수혜국들이다.

한편 유상원조의 경우 1987년 이래 2005년 7월까지 38개국 124개 사업을 지원했다. EDCF는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기금전대차관, 물자차관, 사업준비차관, 해외투융자금 등으로 구별되는데 실제로는 위 124개 사업 중 개발사업차관이 74건, 기자재차관이 49건으로 대부분 개도국의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고 있다. 기금의 조성 총액은 2005년 7월말 1조 6573억원으로, 이 중 정부출연금인 6,799억원, 재정융자차입금이 1,875억원, 이익잉여금이 7,899억원이다. 이 중 정부출연금인 6,799억원, 재정융자차입금이 1,875억원, 이익잉여금이 7,899억원이다. 이 중 재원이랄 수 있는 정부출연금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98~02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3년에야 재개되었다. 정부출연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누적 승인액이 기금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금고갈의 우려가 지적되어 왔는데, 수출입은행은 2006년부터 정부의 추가출연이 없다면 2007년에는 EDCF가 3,3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승인 즉시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기금사업의 특성상 정부출연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며, 원조사업에 대한 정부 내 적극적인 인식의 부족 또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EDCF 기금의 조성현황(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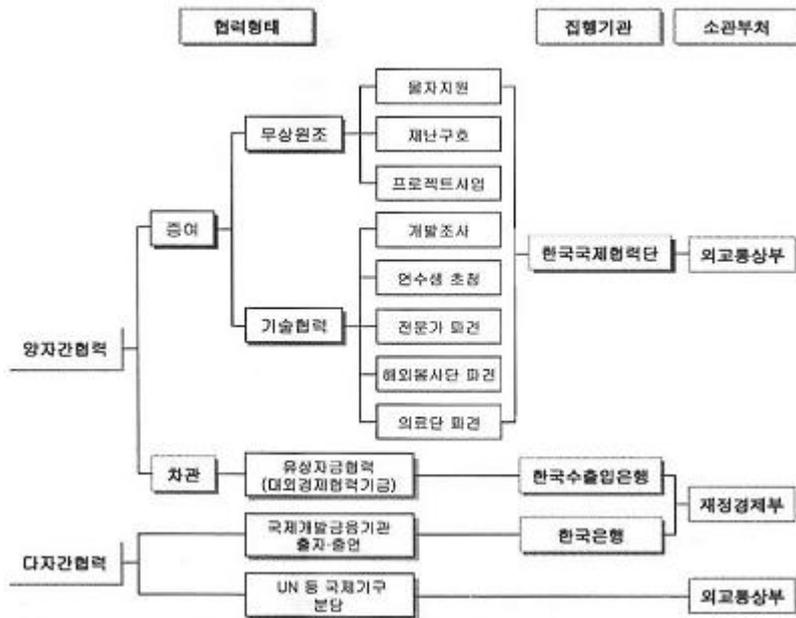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	------	------	------	------	------

정부출연	-	-	-	800	700
차 입	△87	△133	△180	△203	△203
운용수익	567	472	366	328	354
합 계	480	339	186	925	851

제3절 ODA 관련 기관 및 운영체계

우리나라 ODA 체계와 관련기관, 법령을 보면 [그림 2]처럼 볼 수 있다. ODA는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 정부에 직접 제공하는 양자간 원조와 국제개발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다자간 원조으로 나누며, 양자 간 원조는 상환의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무상원조에 해당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통상부 감독 하에 원조 전문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집행하고,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개발차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무상원조 중 무상자금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기자재를 공여하는 물적지원 사업, 프로젝트형 사업, 현금공여 사업 등 무상자금 협력과 개발조사사업, 연수생 초청사업, 전문가 파견사업, 청년봉사단 파견사업, 의료단 파견사업 등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자간 지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20여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국제협력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UN등 국제기구 분담금은 외교통상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재정경제부가 관장하고 있다.

반면,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되는데, 개도국의 산업개발 및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목적 아래 1987년 7월 150억 정부출연으로 설치된 개발원조자금이다. EDCF의 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 장관이며, 기금지원 업무의 실무담당은 수출입은행이 맡고 있고, 지원요청 사업의 접수와 정부 간 협정체결 등은 외교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다자간 원조는 World Bank, UNDP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등을 통한 간접지원으로서, 재정경제부에서는 한국은행을 통해 IBRD, IDA, 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를,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는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부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ODA의 운영 체계

제4절 ODA 사업의 문제점

1) ODA 정책의 소극성

우리나라 ODA사업은 대체로 2-5년을 사업기간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는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1년이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의 단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단기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원조사업 수요조사는 수혜국의 요구 시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개발의 목표, 주요정책과제, 투자우선순위 등에 입각한 유망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사업 선정의 경우에도 특정 분야의 역량개발과 성과제도에 토대한 것이라기보다 정형화되어 있는 협력수단별 요청방식으로 구성되어 왔다. 때문에 각 단위 사업들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개별, 단기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다른 ODA 원조국과 국제개발기구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향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ODA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 ODA 전략수립과 유무상 원조 체계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ODA는 국제기준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절대규모 면에서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ODA는 10배 이상 증가하여 2005년에는 7.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조가 비체계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향후에도 문제는 ODA 규모를 늘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으로는 ODA 정책의 이념?목표의 불명확 및 그에 따라 장기적 비전?전략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난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주어진 원조 수단과 방식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성과지향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공적개발원조 130개국

공적개발원조 자금 지원국가수가 파악된 15개국 중에 각 국가별 평균지원금액은 한국이 260만 달러(3억 3천억 달러/130개국)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지난 2003년 3억 3400만 달러로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가 22개국과 비교할 경우 20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금액대비 지원 국가는 130개국으로, 89억 1100만 달러로 150개국을 지원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국가에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157억 9100만 달러로 90개국 지원 것에 비해 금액은 2%로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지원국가수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임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외형적인 지원국가수만 130개국에 다라는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조사대상 중 지원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는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3개국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 국가는 일본에 이어 2위로서, 공적개발원조의 지원효과가 의문이다.

우리나라와 경제력 순위가 비슷한 호주는 12억 달러, 네덜란드는 40억 달러, 스위스는 13억 달러, 벨기에는 19억 달러 등으로 우리나라의 지원 금액이 현저히 낮다. 또한 지원 금액이 비슷한 뉴질랜드(1억 7천만 달러), 룩셈부르크(1억5천만 달러)등의 지원 대상 국가는 21개국가별 평균 지원 금액이 룩셈부르크 900만 달러, 뉴질랜드 800만 달러로 우리나라 평균지원 금액 260만 달러보다 훨씬 많아 지원의 집중효과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ODA에서 제 3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원조 선진국들이 오래전 스스로 제한한 구속성 원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이고 단기간에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특정 부문과 과제에 대한 목표와 기대성과를 분명히 한 지원보다는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유형화된 소극적 방식의 지원이 다수였다. 수혜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ODA/GNI 비율이 0.1%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ODA규모는 3억3천4백만 불로 국민소득(GNI)대비 0.06%로, OECD/DAC 회원국 평균인 0.25%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GDP)가 유사한 네덜란드 (0.81%), 스페인(0.25%), 호주(0.25%)는 물론 1인당 GNI가 유사한 그리스(0.21%), 포르투갈 (0.21%), 뉴질랜드(0.23%)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대 개도국 ODA는 우리나라 외교지표확대, 국가 이미지 개선, 브랜드 가치 제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및 영향력 확대 등 궁극적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외교정책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OECD 가입 10주년인 2006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1%까지 확대한다는 외교통상부의 노력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4) NGO를 통한 ODA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최근 5년간 대외원조 예산 중 NGO를 통해 집행된 내역을 보면 점차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DAC 지원금액 중 NGO 지원액 비중 2.1%에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ODA 지원을 위해 NGO 참여확대와 전문적·독립적 사업수행능력 육성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NGO를 통한 원조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저원조에 비해 사업의 목적이 가장 인도적이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원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벽지에 지원활동을 실시하여 원조의 효과가 일반 민중까지 미치며, 공적원조의 취약점인 관료화의 성격이 적기 때문에 대외원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NGO활동은 그 역사도 아직까지 많이 짧고 자체적 재정자립도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의 NGO활동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되고 있다. 이런 우리나라 NGO들의 활동을 돕고 전문성과 재정적 자립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제5절 한국형 ODA 모형 정립의 필요성

DAC 회원국들은 ODA의 규모 및 구조면에서 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지리적, 역사적 및 산업 구조적 같지 않기 때문에 ODA 대상국의 분포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우리나라도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특성에 맞는 ODA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ODA 여건의 후발국으로서 지난 50년간 선진국들이 축적한 경험을 거울삼아 세계적인 개발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ODA의 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장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ODA의 역량확대에 주력하기 보다는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ODA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 DAC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DAC 회원국인 선진국들에 비해 ODA 지원 경험은 적으나 개도국의 여건을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개발경험, 기술 및 기법 등이 개도국에 보다 용이하게 접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도 과거 ODA의 수혜국이었음을 인식할 때 같은 개도국으로서 다른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남다른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경제 개발 면이나 경제 규모면에서 ODA 제공국 중 중하 그룹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제한된 능력으로 배갈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리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지역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DAC회원국 중에 아태지역으로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이 있으나 그 중 일본이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아시아국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ODA 대상국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많은 개도국이 우리나라 개발경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도국에 알려야 할 것이며, 특히 한국의 개발의 원동력은 풍부한 천연자원이 아닌 양질의 인적자원이었고 이는 높은 교육열의 소산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개발모형이 대외 지향적이었으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개발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제6절 ODA사업의 개선방향

1) 체계적?지속적?차별적 수혜국 선정

ODA 수혜국은 각 지역별 지원대상국을 중점 선정 할 필요가 있다. 수혜국과 우리나라와의 외교적인 관계, 경제교류, 수혜국 정부의 안정성 및 경제발전의 잠재적 능력, 사회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있는 것일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고려 사항들 이외에 ODA 사업은 특성에 따른 목표, 원칙,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혜국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ODA 사업은 국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파견, NGO지원 등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DA 사업이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혜국의 정부 재정 상태와 상환능력을 고려하고, 기술적 습득 능력을 고려하여 수혜국이 선정되고 있다. 또 각 정부부처들은 기관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ODA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는 IT서비스 및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의 전수 및 판매 잠재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성공 사례를 수혜국에 소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 부처별로 ODA 수혜국 선정이 이루어지다보니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모호한 기준에 따라 수혜국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 인해 수혜국에서의 성과를 확인할 길이 없다.

향후 디자인 부문 ODA 사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일정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부문 ODA는 향후 특정한 목표와 원칙 그리고 성과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원칙하에 수혜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수혜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혜국의 기술현황과 기술 능력, 문화적 상황 고려 및 발전 능력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ODA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ODA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개도국으로부터 기술 국제협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ODA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이외에 지식경제부 산하기관들도 자체 필요성에 따라 ODA 사업을 수행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ODA 지원 기관 간 협력 및 조정미흡으로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예산, 전문 인력 등에 많은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 등 일반적인 국제협력자금을 활용한 전문 부문 ODA의 경우 한 분야에 집중하거나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각 부처는 흩어져 있는 ODA 사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특수성을 갖는 각 부문 전문인력 양성과 ODA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NGO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체조달이 정부보조액을 넘어설 수 있는 독립적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과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의 필요성

ODA는 수행기관의 독자적인 역량만으로는 수혜국과 원조국 모두에게 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개별원조기관 자체 역량에 의한 독자적인 정보수집이나 사업 진행보다는 다양한 국내외 ODA 관련 기업이나 민간단체,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수행될 때 원조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ODA는 전문성을 가진 고등교육기관과 해외 사업 망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ODA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정부기관, 민간기업, 대학기관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수혜국과 원조국 사이에 활발한 문화 교류를 가져 올 것이며, 지속성과 체계적 접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에는 수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대국민 ODA 홍보활동 강화도 필요하다.

2) 사업간 연계성 확보 및 선택적 통합 모형

ODA 당사국인 수요자의 입장보다는 공급자 즉 원조국 시각에서 연구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젝트 사업, 장비 및 기자재 원조 등이 진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ODA 사업 추진의 목표, 성과, 사업내용 등에 중심을 두고 해당 사업의 실시 유형과 방식이 선택되어질 ODA 사업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정형화된 사업 유형의 틀 속에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담아내는 사업 방식에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향후 부문 ODA는 광범위한 분야에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기술능력 향상을 달성하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향후에는 타 사업간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DB화가 필요하며, 단위 산업간 모듈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ODA 사업 내용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크게 인적개발, 인프라 정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은 개도국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조능력을 함양하여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추진해온 연수생 초청사업의 경우, 우리의 경험과 전문지식, 기술 및 지식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개도국의 인적, 제도적 개발능력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는 한 번 생각할 대목이다. 인적자원 개발 목적의 ODA가 수혜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초청연수 사업이나 단기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04년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은 전체사업의 6.5%를 연수사업에 배정하여 124개국 2,375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였다. 단기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할 뿐 대학교 등 전문 교육기간에서 장기간 체제하면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하였다.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적이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생의 기술능력을 축적하고, 이것이 다시 수혜국의 기술능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들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인프라 확충을 위해 ODA 사업은 대체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의 정보망 구축이나 정보센터 구축 등과 같은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요 사업의 대부분이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고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의 연계 정도는 미흡한 수준이다. 인프라가 기술능력 제고의 근간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기술능력 발전으로 확장되기 어렵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디자인 기술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초청연수 사업이나 인적 개발 사업과의 연계는 물론 해당 수혜국의 제도나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기술 능력이 낮은 국가에서 관련기술 센터를 구축하여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수혜국가 지속적 협의도 필요하다.

제 3 장 디자인 부문 공적개발원조(ODA)

제1절 한국 디자인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디자인 진흥이 최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 후반의 일이다. 6.25동란으로 인하여 국토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본래 취약했던 산업생산 기반조차 거의 모두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가내공업이나 수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원조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 후인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수출위주의 산업정책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품포장과 디자인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60년대 노동집약 조립가공 산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연구개발 및 독자기술기반 산업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산업 조성을 통한 경제기반을 갖추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다양한 정부정책으로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의 역량은 미국, 영국 등 선진디자인국의 80% 수준이며, 대만, 중국 등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산업규모는 1998년 2조 6백억에서 03년 6조 8천 억 원으로 증대되었다.

1991년 G7제품기술개발사업은 각 부문별로 구분되는데 반도체 산업, 광대역 통신 산업, 가전사업, 자동차 사업 등이며, G7기반기술 사업에는 감성공학 기술 사업 등 7개 분야가 선정되었다. 2010년 디자인 산업규모는 전체 GDP의 3% 수준인 36조로 예상하며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은 2002년 이후 2010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9.2%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자인 인력도 연간 36천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산업 저변이 크게 확대되어 디자인 전문기업 수도 1997년 80개에서 2006년 1,200여 개로 증가 활동 중이며, 그 외 미신고 업체도 1,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으로서 미국의 개발 원조를 받아왔다. 이러한 수혜국과 경제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조국으로 새롭게 국제사회로 위치를 갖추고 있다.

표 4]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발전사

1950년대	공예산업 부흥기	수공예산업 장려
1960년대	디자인의식 태동기	수출을 위한 ‘응용미술’ 중요성 인식
1970년대	디자인포장 진흥기	국가 중심 디자인 진흥 활동, 디자인협회 및 기업 중심 디자인 활동
1980년대	굿디자인 확산기	디자인 진흥기관 활성화 및 굿디자인 활동 확대
1990년대	디자인산업 조성기	국가 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지역디자인 활동 확대
2000년대	디자인세계화 추진기	코리아 디자인센터 완공, 양대 세계디자인대회 개최

제2절 수혜국(受惠國)으로 디자인 부문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디자인 진흥이 최초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 후반의 일이다. 6.25동란으로 인하여 국토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어 본래 취약했던 산업생산 기반조차 거의 모두 붕괴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가내공업이나 수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원조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유휴 노동력을 활용, 간단한 공예품이나 수공품을 생산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디자인과 마케팅 능력을 전수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미국의 후진국 지원전략에 따른 것이다. 1958년 미 국무성 국제협력처(USAID)가 서울에 한국공예시범소(KHDC: Korea Handicraft Demonstration Center)가 서울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디자인 진흥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 ICA는 미국국무성 산하의 독립 부서로서 산업화가 저조한 후진국가들을 위한 기술원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다. 아더 폴로스(Arthur pulos)는 한국공예시범소 설립의 계기가 되었던 ICA의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47년 미국 의회가 40억 달러에 달하는 마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서유럽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원조를 받게 되었다. 1955년 후버재단은 마셜 계획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억 달러를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지원하므로 미국의 상호안전보장계획을 더욱 더 확고하게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ICA는 이 새로운 계획을 따라 확실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안정한 후진국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조를 하기 시작했다.

1955년, ICA는 미국 정부로부터 그와 같은 프로젝트의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네 군데의 미국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들을 선정, 위임했다.

?러셀 라이트사 (홍콩, 대만, 타일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월터 도윈 티그사 (그리스, 요르단, 레바논)

?데이브 채프먼 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멕시코, 수리남, 엘살바도로, 자마이카, 코스타리카)

?스미스 서 맥도모트 사 (한국)

이 회사들은 각기 위임받은 후진국들의 수공업 활동을 조사하여 특히 미국과 같이 개방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기 위한 임무를 시작했다. 이 계획은 곧 산업이 낙후된 후진국에게 디자인력과 상품화 능력을 길러줌으로서 가난의 굴레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좌경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ICA는 미국의 디자이너들이 후진국들의 오랜 문화와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강요하여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가 위협 당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ICA로부터 한국 담당자로 선임된 스미스 셔 맥더모트사(Smith scherr & mcdermott;SSM)의 파트너인 스미스 셔는 3개월 동안 한국 전역을 답사했다. 수공산업의 역사와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서울, 부산, 통영, 강릉 등 주요 도시들을 방문한 것이다.

나는 미국 정부의 EOY로 선발되어 3개월 간 한국의 공예 산업 현황을 답사하고, 유망한 분야를 선정 ?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 당시에 나는 오하이오주 아크론 시에서 「스미스 & 맥더모트」사라는 디자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극동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컸기에 지원했다. 3개월간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공예산업의 중심지를 몸소 답사하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 수공예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략적인 제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1955년 11월에 완성된 그 보고서에는 수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2년 여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던 그 계획이 ICA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1957년 8월 23일의 일이다.

KHDC의 설립은 한국의 수공예산업과 소규모 가내공업을 육성하려는 원조계획의 일환으로 ICA와 SSM이 맺은 계약에 의한 것이다. 1958년 1월 SSM은 스탠리 피스틱, 폴 탄렌티노, 오스틴 콕스에게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킨 다음 한국으로 파견했다. 그들은 서울에 KHDC를 설립하고 한국의 주요대학교에서 디자인과 마케팅 등 연관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산업 도자 디자인 담당교수를 역임한 피스틱은 도자기 산업의 지원과 대학의 디자인 교육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그는 홍익미술대학(현 홍익대학교 전신)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도자 실습장을 건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독자적인 공예공방을 운영했던 탄렌티노는 가내공업 및 소규모의 기원과 함께 센터내의 교육 훈련을 담당했다. 콕스는 금속 및 보석디자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KHDC의 운영을 책임 맡은 사람은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노만 디 한(Norman de han)이었다.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디 한은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총체적인 책임자는 ssm사의 파트너이자,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ASID)의 회원인 스미스 셔였다. 스미스 셔는 미국에서는 물론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센터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한 예로 그는 오하이오 아크론 시에 있는 SSM본사에서 한국제출의 상품화와 한국학생들이 미국에서 공업디자인 교육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전개했다. 데이비드 무라노(David Murano)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디자인 - 머천다이저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KHAC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통 공예와 소규모 가내공업의 디자인, 품질, 기능을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높여줌으로써, 기본적으로 농업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한국공예시범소(KHDC)가 ICA로부터 원조를 받고, 한국정부로부터 원화로 지원을 받아 운영 자금을 충당했다. 한국공예시범소(KHDC)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첫째, 미국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 그 것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였다. 둘째, 제조업체들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산, 품질관리, 재료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했다. 둘째,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사업가들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독려했다. 넷째, 외국에서 한국 상품의 상품화와 마케팅 활동을 하였다. 다섯째, 전통공예와 관련이 깊은 지역의 조사를 위한 현장답사 및 지역 공예가와 디자이너들을 위한 참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예시범소(KHDC)는 특히 공업디자인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첫째, 목표를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등과 같은 미술대학에 공업디자인 과정을 개설하는 데 두었다. 두 번째 목표는 ICA에 의해 선발되어 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특히 그 당시 취약하기만 하던 우리의 수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한국공예시범소(KHDC)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1961년 2월 23일에 문을 닫았지만, 우리나라 디자인분야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공예시범소(KHDC)의 월보는 『Korea Industri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고, 모든 영문 공식문서와 보고서에서는 Industrial Design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제3절 원조국(援助國)으로 디자인 부문 공적개발원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디자인 기술 이전 등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디자인 원조에서는 특히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원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의 공여국 중심의 원조방식으로부터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지향함으로써, 원조의 주목적을 자국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서 벗어나 수원국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후발 개도국 디자이너들의 초청연수 프로그램, 국내 우수 디자이너들의 현지 방문, 디자인 장비 지원 등 디자인 원조계획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국제 디자인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원해줄 수 있는 원군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 정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따라 우리 디자인 회사가 진출하여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그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디자인재단(Japan Design Foundation:JDF)이나 JIDPO의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JDP에서는 별도의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도요다 자동차사 등과 같은 대기업의 기원을 받아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지역의 디자인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즉 퇴직을 앞둔 고령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1년여 동안 한시적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되 급료는 회사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인 경험이 많고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4절 ‘ 마셜 플랜’ 과 디자인

1)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

‘ 마셜 플랜’ 2 차 세계대전 후,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라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 1880-1959)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였기에 ‘ 마셜 플랜’ 이라고 한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일본(日本)에도 적용되었다. 1947년 11월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빠른 시일 안에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경제부흥계획의 수립을 요청했다.

마셜 플랜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유럽부흥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유럽인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셜은 연설에서 “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부흥계획을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계획은 공동의 계획안으로 되어야 하며, 유럽 국가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국가에 의해서 동의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인 자립적 기반 위에서 원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원조의 목적을 두었다. 셋째, 계획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참가국들이 수용해야 할 일정한 조건을 단서로 붙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미국 의회는 1948년 3월 상원에서 67표 대 17표, 하원에서 329표 대 74표로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을 통과시켜 마셜 플랜을 승인했다. 경제협력법은 1948년 4월 3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얻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1948년 4월부터 1951년 말까지 서유럽에 12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원조를 하였다. 그리고 1952년부터는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 MSA)에 근거한 원조로 계승되었다

마셜 플랜의 진행과 위로부터 추진된 사회 시장경제적 정책지원에 힘입어 경제는 급속도로 회복되고 확장되어, 1950년에 이미 전쟁 이전 제 3 제국의 생산성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발발이 시장 경제적인 관점에 따라 곧바로 전세계적인 투자 붐을 일으킴으로써, 1952년부터 서독의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매년 경제성장률은 급증했고, 실업은 사라지고 점차 완전고용으로 바뀌었다. 1950년에서부터 1960년 사이에 총국민생산은

세배로 증가했고, 국민주택이 3백만 채나 건설되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가스 렌지 등이 생산되어졌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1960년에 이미 서독을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산업생산국으로 만들었고, 1961년에는 세계 제 1위의 자동차 수출국으로 끌어올렸다. 이와 동시에, 서독 경제기적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일련의 폭력적인 생산수단 독점화가 이루어졌다. 독일의 일반소비자들은 미국화된 소비사회로 전향되었다.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이동은 있었으나, 새로이 수평적으로 평균화된 중간계층이 형성되고 점차 확산되어갔다.

2) 디자인 진흥정책 및 협회의 발전

유행에 기초한 외형중심적인 미국식 스타일링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출진흥정책의 일환으로서 디자인의 개발이 대두되었다. 우선 수출증대에 대한 관심 속에서 디자인은 상품의 질을 규정 짓는 요소로서, 그리고 판매증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졌다. 여기에서 디자인의 개발이 산업적 대량생산 기술개발과 연관된 것으로서, 과학기술의 발전적 진보와 함께 제품의 조형적 개선이라는 관점 하에 강하게 요구되었다. 따라서 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이 새로이 개편되고, 그 당시 재형성되고있던 독일공작연맹(der Deutsche Werkbund)과 같은 디자인 단체들이 세계시장을 기초로하는 경제확장에 부합되도록 정치적으로 재편성되었다.

1951년 4월 4일 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인재단으로서 디자인심의회가 발족되었다. 여기에서 이미 굿 디자인 제품들의 선정과 전시에 대한 생각을 기초로 디자인센터 슈투트가르트(Design Center Stuttgart)가 설립되고, 매년 "독일의 우수선정품(Deutscher Auswahl)"을 통하여 서독 제품의 디자인 수준을 알렸다. 당시에 구성된 또다른 디자인 협회로서, 1951년 쾰른 지역의 독일산업연방연맹(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e.V. Koeln)에서 산업디자인노동연합(Arbeitskreis für industrielle Formgebung)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1953년부터 매년 "좋은 산업형태(Die gute Industrie Form)"를 하노버산업박람회(Industriemesse Hannover)의 특별 전시로 개최하여 왔다. 또한 1952년에 다름슈타트(Darmstadt)에 신기술형태연구소가 설립되고, 프랑크푸르트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이 박람회의 특별전시 "잘 조형된 산업결과(gut geformter Industrieerzeugnisse)"의 큐레이터로서 전시를 주관해왔다. 1954년에는 에센산업형태연구소(Haus Industrieform Essen)가 설립되고, 1959년에는 독일산업디자이너협회가 결성되었다. 이 협회들 모두 산업의 총체적 이익에 긴밀한 관계를 갖았다. 따라서 "좋은 형태(Gute Form)"는 산업체의 판매보장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게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디자이너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결국 대학의 건립을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바탕이 되었다.

3) 솔자매재단에 의한 설립(1947-1953)

1950년 초 미 군정부, 즉 미 고등 고문관 맥클로이(John McCloy)로부터 대학설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안 받았다. 여기에서 대학설립에 필요한 자금의 반을 미 군정부의 재교육기금(Re-Education-Fonds)에서 기부형식으로 제공받기로 이야기되었다. 미 군정부가 이 대학의 설립에 대해 갖았던 이러한 관심의 내면에는, 무엇보다도 미국 헤게모니 하의 민주화로 소위 반공을 기초로 한 서방 자유세계를 건설한다는, 재교육정책의 속셈이 깔려있었다. 울름조형대학의 설립이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후 독일의 시대적 상황 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계획되고 실현되어졌다.

제 4 장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수립

제1절 ODA 모델 목표 및 전략

디자인은 사회적인 니즈(Needs)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한 디자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편견은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디자인의 세계화와 보편화가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들이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경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한 제약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디자인 부문을 통한 ODA원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그들이 개발한 디자인을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거나 또는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과 디자인을 제3세계에 여과 없이 그대로 전수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 이디스(S.M.Mohammed Idis)는 제3세계의 디자인은 "선진국에서는 디자인이 사치품이나 고가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자주 사용되는 반면, 제3세계의 디자인은 기본적인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문화적인 차원에서 밀려난 선진국의 부적절하고 낙후된 기술과 제3세계의 고용한 문제해결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선진국의 개발이론이나 기술 또는 디자인은 후진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디자인 수혜국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의 특수성에 맞는 공적개발원조 모형 정립이 필요하다.

1-1 상호국익 도움에 ODA 목표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의 목표는 디자인을 통한 원조국과 수혜국이 상호 지속가능한 기술능력 구사와 문화적 상호 교류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 디자인 인력을 기반으로 디자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디자인 활용을 통한 개도국 발전의 목표에 접근하기 어렵다. 정부나 기업 또는 시민 차원에서 ODA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과 점차적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 교육을 통해 ODA를 통한 수혜국의 기술능력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혜국에만 편익 되는 것이 아니라 원조국에도 디자인 산업의 확대를 가져 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산업이나 상호 문화 교류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디자인 기술능력 구축과 교육 그리고 문화 교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 부문 ODA가 추진해야 할 주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1-2 디자인 부문 ODA의 기본 원칙

디자인을 통한 ODA가 개도국의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ODA 정책이 선별적이어야 한다. 첫째, 수원국의 자구노력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난 경험을 통해 자국 노력 없는 국가는 지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혜국 정부가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며 또한 이를 추진할 최소한의 안정된 정부가 있는 국가만이 우리의 ODA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ODA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몇몇 국가에 집중시킴으로써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소지역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킴으로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인력자원의 힘으로 경제개발을 이루었다는 경험을 살려 우리의 ODA 중점분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별 프로젝트는 어려움에 부딪쳐 실패하거나 한 사업에 그칠 경우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계된 사업을 묶어 한꺼번에 추진하거나 혹은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2 ODA 지원 기반

디자인은 문화적으로 수혜국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특수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디자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요소나 기술 등 기계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DA 지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고유한 문화를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상호교류 및 사회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디자인을 통해 다른 사회나 국가에 전달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활동과 문화의 상호교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개도국에서의 ODA 시도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서구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사회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디자인 부문 ODA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디자인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할 때, 수혜국의 문화와 사회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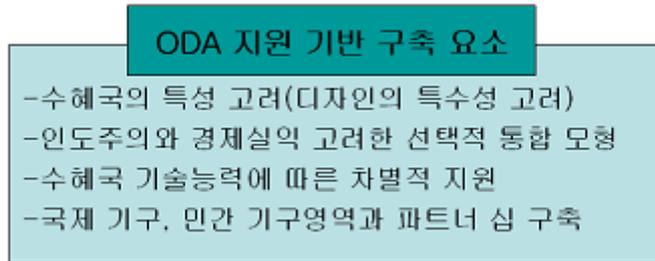
인도주의와 경제실익을 고려한 선택적 통합 모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ODA 모형으로 4가지 유형, 즉 인도주의형, 식민지관리형, 경제실익형, 안보 전략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디자인 부문 ODA 모델창출을 위하여 인도주의 형과 경제실익형을 혼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ODA의 보편성과 특수성, 즉 글로벌 이익과 국가 이익 간의 수렴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부문 ODA 모형 구성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혜국별로 상대적 비중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혜국 기술능력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ODA를 위한 차별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ODA 수혜국들의 기술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능력 단계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되는 ODA를 원조해야 한다. 디자인은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재 수혜국의 기술능력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디자인 선택의 중요한 전략적 준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수혜국의 기술능력에 의거해서만 디자인 ODA의 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혜국들의 기술능력 수준에 따라 각 단계별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속한 수혜국들의 종합적인 경제 수준, 잠재적 시장가치와 전망, 의식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별적 전략은 일종의 선택과 집중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수혜국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디자인 부문 ODA의 효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 시장 개척까지 고려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국제기구와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정에서 ODA 수혜를 입었다. 이를 경험으로 보다 효과적인 디자인 부문 ODA를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민간 문화 교류를 통한 ODA를 통한 유대 및 관리를 위해서 국제기구와의 ODA 협력의 필요하다. 또한 디자인은 ODA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해 현지조사 및 ODA 사업 추진,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디자인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수혜국 진출을 위해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의 필요성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활력을 ODA 활성화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민간조직의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한 디자인 기술 ODA 협력도 중요한 파트너십 구축의 한 측면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지역, 성격 및 그 효율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적 국제기구와는 개별 국가지원의 프로젝트, 인력양성사업, 연수 등 단위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범세계적 국제기구의 경우는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워킹그룹에서의 적극적 참여 등을 추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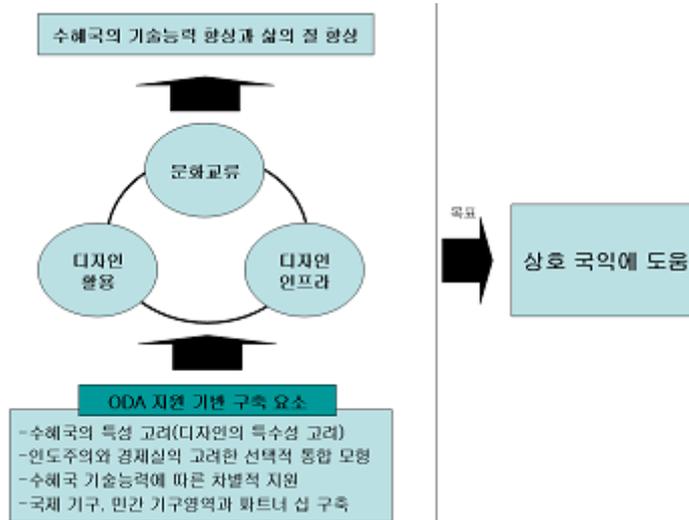


[그림 3] ODA 지원 기반 구축 요소

1-3 ODA 지원 전략

디자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인도주의와 경제실익을 고려한 선택적 통합, 수혜국 기술능력에 따른 차별적 협력, 국제기구와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등의 네 가지 원리를 토대로 ODA 지원 모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수혜국의 디자인 기술능력 구축을 통해 디자인분야를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디자인 부문 ODA의 기본적인 실행 모형은 [그림 5]와 같이 디자인 활용, 디자인 인프라, 그리고 문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디자인 ODA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디자인 부문 ODA의 기본적인 실행 모형

디자인의 효과적인 ODA 모델 전략은 디자인 활용과 디자인 인프라 구축 및 상호문화 교류의 세 축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혜국 개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치 창출, 접근성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첫째, ‘디자인 인프라’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디자인에 대한 문화적 접근성의 확보다.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제적인 경제격차 해소 노력에 집중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은 디자인 활용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 가치극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둘째, ‘문화’와 ‘디자인 활용’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디자인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의 역할 역시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디자인 인프라’와 ‘활용’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디자인을 이용한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가치의 창출이다. 디자인 인프라를 토대로 한 디자인기술의 활용은 국가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이용자인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전략은 ‘수혜국의 기술능력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하에 네 가지 전략적 원칙을 토대로 활용, 인프라, 문화에 대한 전략적으로 ODA 자원 배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수혜국은 이러한 디자인 ODA 모형에 의거하여 문화적 접근성 확보, 가치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룸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술능력이 향상된 국가로

달바꿈하게 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활용 수준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디자인 부문 ODA가 경제적 활력과 더불어 수혜국가의 삶의 질 향상에 동력이 될 것이다.

제2절 디자인 부문 ODA 고려 사항

2-1 수혜국 중심 접근

199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정보통신의 발달과 삶의 질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국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정보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ODA에 기반을 둔 국제협력 활동은 원조국의 경험에서 창출된 지식을 수혜국의 상황에 적용하여 디자인 활용을 극대화하는 지식기반 활동이다. 수혜국의 특수한 문화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지식을 전해야 한다. 수혜국의 입장에서는 디자인 ODA에서 얻어진 지식과 연계,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ODA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수혜국의 디자인수요 충족과 이를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도국인 수혜국의 경우 자신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혜국 내부의 정보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신뢰성 있는 외국 원조기관이나 국제기구 또는 해당 수혜국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외국 전문가들과의 교류의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혜국의 정보기술능력 축적 정도가 낮기 때문에 첨단 기자재 및 설비의 활용도가 낮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수혜국의 교육수준, 기술 및 응용분야의 정확한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부문 ODA 역시 원조국 중심 모형에서 수혜국 중심 모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패러다임은 공급자인 원조국의 필요와 능력을 중심으로 하지만, 수요자인 수혜국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능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인 수혜국 중심 모형은 수혜국의 정책 및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협력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각 협력 부문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강점과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ODA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1990년대 말부터 도입하여 활용해온 ‘체계적 기획 접근(Systematic Planning)’이라는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 방법은 개발프로젝트 사업의 시행을 특정국가 및 특정 개발 이슈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이라는 종래의 인식을 지식을 창출이라는 보다 원천적인 차원의 문제로 원조 사업의 지향점을 격상시키고, 원조국 주도로 추진되던 사업을 수혜국의 주인의식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바꾸고, 직접적인 인적자원개발보다는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는 등 새롭게 접근되어야 한다.

2-2 수혜국의 기술능력에 따른 차별적 지원

수혜국 선정 과정에서 기술능력이다. 교육 수준을 충분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동안 수혜국의 기술 능력과 교육은 상관없이 수혜국의 디자인 ODA 사업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디자인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기술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 교육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능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 ODA는 우리나라의 디자인기술에 대한 해외홍보 수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디자인 ODA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술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술능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자인기술 자체의 혁신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환경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개도국들에서는 다섯 가지 공통적인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① 우수한 개발인력, ② 정부의 지원/투자, ③ 해외 기술협력 및 수용과 마케팅 등에 필수적인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④ 국가 차원의 촉진기관 설립과 기업 차원의 산업협회 활동, ⑤ 물적 인프라 뿐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제도가 그것이다. 개도국들이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 내부의 역량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디자인 ODA를 통해 충당하고 수혜국 내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개발을 위한 디자인’ 활용의 여건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능력의 분류는 수혜국의 효과적인 기술능력 축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조국의 원조방식과 내용의 차별화를 통한 효과적인 디자인 ODA 전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원조 방식에 있어서는 기술 수준이 낮은 1단계 수혜국은 자체적인 디자인관련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축성 원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2단계 수혜국은 현지의 생산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활용 및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한 구축성 원조와 비구축성 원조를 탄력적으로 선택 실시하고, 3단계 수혜국은 현지의 기업 및 타 국가의 기업에게도 경쟁 기여를 부여하기 위한 비구축성 원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원조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능력이 낮을수록 하드웨어, 즉 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과 교육 훈련에 비중을 두며, 반면 기술능력이 높을수록 소프트웨어 지원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2-3 타 산업과 수출 연계

디자인 ODA를 디자인 수출과 연계시키는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디자인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기 때문이다. 디자인 부문 ODA 역시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디자인 분야의 비중을 고려한 모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수혜국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차별적 지원 및 협력은 수혜국의 입장에서 디자인 ODA의 실질적 성과와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기술능력의 향상은 곧 더 많은 디자인 수요로 이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수혜국 진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디자인 수요의 확장과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개도국 진출을 계기로 한국 디자인 기술이 확산됨으로써 막대한 증장기적 부대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부문 ODA 모형에 구현시켜야 할 것이다.

ODA에서 디자인 분야의 비중 확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순수 원조의 국제협력사업보다 목적 지향적 협력사업의 증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정보격차 해소 사업 수행기관과 국내 기업 간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ODA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수혜국의 경제 및 디자인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현지화를 통해 사업 대상국별로 특화된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에서는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반도체 등의 시장 규모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 등에 비하면 아주 작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는 미미한 점을 고려한 전략적 모형 구성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디자인, 교육 등은 유지, 보수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므로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능력인정은 디자인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디자인 부문 ODA를 타 산업과 연계된 디자인 부문 ODA 모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문화를 선점한다면 이를 통해 현지 시장을 자연스럽게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2-4 수혜국의 디자인 기술능력 향상

디자인 ODA가 수혜국 경제에 증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ODA를 통해 지원되는 디자인 요소들의 실질적인 산업적 활용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 ODA의 새로운 흐름도 ODA를 통해 수혜국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발전과정, 그리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수혜국의 낮은 기술능력으로는 ODA를 통해 지원되는 디자인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 ODA가 수혜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ODA 모형에 수혜국의 기술능력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능력이란 가장 낮은 단계인 특정 기술의 조작 능력에서부터 기본 생산단계와 제품 및 생산과정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적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술능력의 발달이란 보다 상위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한국형 디자인 ODA 모형은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원조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디자인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어떻게 수혜국에게 이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그 핵심이 바로 디자인 기술능력 향상이라고 할 것이다.

2-5 국제기구와 공공·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디자인 ODA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로 민간부문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디자인 ODA는 이미 민간부문과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 내의 디자인 관련 기업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개도국과의 격차 해소에 공동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IT 분야에서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CISCO Systems를 통한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 과정의 기획·운영, IBM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정보격차 낙후지역에 대한 IT관련 연수센터 설립 운영하고 있다. HP의 디지털 자유 이니셔티브(Digital Freedom Initiative)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목적과 부합되는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NG를 통한 지원이 2.61억불(2004)로 양자간 원조의 18%에 달한다. 또한 NGO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자체 사업비 비중은 10%에 불과함에도 NGO가 자체 모금하는 개발사업비가 2.50억불로 정부의 지원규모와 비슷하다. 특히 NGO가 실제 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론형성, ODA 홍보(Awareness Raising)을 주로 담당하여 약 750개 스웨덴 NGO가 1500개 N해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스웨덴 정부 및 스웨덴 원조기관(Sida)의 무상자금을 지원 받아 ODA의 약 20%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디자인과 관련한 국제협력 교육·훈련 운영의 노하우 제공, 자국 대학과 개도국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네트워크 연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도 유사하게 “B2B”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민간 부문과의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디자인 기술과 충분한 디자인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어 ODA 사업에 민간기업과의 유대강화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큰 성과는 나타날 것이다. 민간기업의 ODA 사업 참여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국제협력 사업에 연계할 수 있다. 국내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비정부 기구와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도 필요하다. 디자인 ODA는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도 활용할 수 있는데, 디자인 교육기관과 개도국 대학의 디자인관련 학부 또는 학과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수혜국의 수요조사, 교과과정 설계, 운영, 수혜국 디자인교육기관의 설립 운영에 노하우 전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ODA는 우리나라 보다 ODA 사업의 연혁이 오래되고, 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의 원조기구와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외국 원조기구와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수혜국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는 일본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제휴를 통하여 디자인협력사업 공동평가, 포럼 및 워크숍 참여 등 교류를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ODA는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통하여, 디자인 활용 개발 사업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도국 사업에 공동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ODA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문 인력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디자인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확대 될 수 있다. 특정 개발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및 기업 등이 체결을 강화하고 기부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ODA를 실행하는 선진국의 수행체계는 통합화 모형과 전문화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화 모형은 디자인 ODA를 포함한 모든 ODA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모형이고, 전문화 모형은 영국을 제외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추진하는 모델로 각 영역별로 전문기관을 두고 있는 방식이다. 통합화 모형은 ODA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디자인이 갖은 전문성 면에서 취약점을 보인다. 전문화 모형을 추진하되 영역별로 ODA를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조정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전문화 모형으로 디자인 OD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에 비해 디자인 ODA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기존의 디자인 ODA 수행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도 부처 또는 기관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점과 다른 ODA처럼 일률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디자인 부문 ODA의 성과를 시대하기 어렵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디자인 ODA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디자인 부문 ODA의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화 모형이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수행체계 모형이라고 할 것이다.

2-1 전문화된 ODA 모델 구축

디자인 부문 ODA 모델은 디자인 ODA 사업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통합적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략체계와 수행체계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ODA 사업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 확보를 주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디자인 ODA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자인기술과 지식을 수혜국에 제공함으로써 수혜국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디자인 ODA가 순수 원조만이 아니라 디자인 수출시장의 새로운 개척자가 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화된 ODA 모델 목표는 디자인 ODA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와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성, 체계성, 효율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디자인 ODA 전략을 가져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디자인 부문 ODA 모델 갖추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모델의 기대효과는 기존의 분야별 디자인 ODA 사업 참여와는 달리, 수혜국 전체의 디자인 기술능력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디자인 ODA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국제협력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2-2 ODA 수행 전문기관 필요성

1) 수행 전문기관 필요성

전문화된 ODA 모델을 디자인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변화되는 국제사회의 ODA 패러다임에 조용하는 혁신적인 ODA 전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흥적이고 산발적인 ODA 사업은 부실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자인 부문 ODA 수행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 분야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예방하고 기존 사업추진 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디자인 ODA 모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기관 설립으로 인한 장점은 첫째, 디자인 부문 ODA에 관한 각종 사업을 조정하고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 둘째,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부문 ODA 사업들의 중복 요소들을 최소화 하고 낭비적 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ODA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국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산·학 연·정·간에 정보 및 지식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고, 국제기구, 외국 원조기관과의 공동프로젝트 수행 참여에 따른 선진국의 대외 협력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2) ODA 기관의 사업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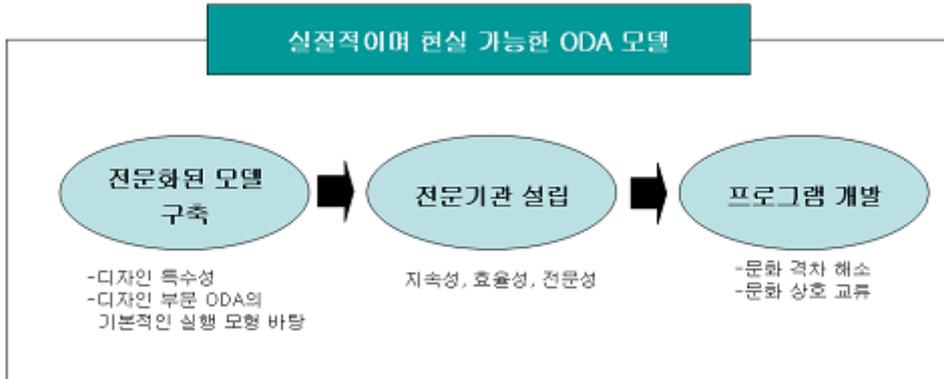
디자인 부문 ODA 기관은 프로젝트의 기획, 집행, 수혜국과의 업무협약, 외국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참여 확대 등 디자인 ODA 관련 활동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ODA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과 관계설정을 분명히 해야 ODA 사업 추진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ODA를 총괄하는 기관은 기존대로 외교통상부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디자인 분야에 한해서만 신설조직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ODA 전반에 관한 사업의 일관성, 중복 방지 등은 ODA 총괄기관이 담당하고 디자인 분야의 ODA에 대해서만 신설조직이 조정하고 관리하며, 정보 제공과 자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3 문화의 재정립 프로그램과 대국민 ODA 홍보

디자인 ODA 사업 조정과 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 후 ODA 모델 목표 설정에 부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상호 문화격차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격차 해소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커다란 틀 내에 속해 있는 개념, 즉 빈곤감소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선의 관점에서 조직의 방향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라는 좀 더 포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수혜국 원조는 경제적 접근성이 중심적인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문화적 활용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낮은 수준의 기술능력을 지닌 국가에 인프라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원조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디자인 개발협력을 실시하여야 할 때다. 따라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화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수혜국의 기술능력,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

2003년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우리 ODA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자료집에서 국정홍보처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의 45%가 우리 ODA 선진화 과제로 ‘ODA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지적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ODA 규모 확대와 함께 대국민 홍보강화를 2003년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디자인 부문 (1950년대 후반부터)경제개발 과정에서 ODA 지원을 받아 현재 디자인 부문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디자인 국가로 성장해 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이러한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전기받기 위해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 대상 ODA 여론조사의 주기적 실시, 사회여론주도층 대상으로 ODA에 관한 강연 확대, 책자 발간, 홈페이지 구성 등 홍보를 통해 적극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오늘 날 디자인은 ‘산업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 관점과 자국의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자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문화의 우월성 속에 지속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ODA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원칙과 체계,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고려 없이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ODA를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사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자인분야를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지원 모델창출을 위하여 ODA의 실행을 위해서는 ODA 주관기관의 필요성과 디자인 부은 특수성을 고려하며 사업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ODA 패키지로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이며 현실 가능한 ODA 모델창출이 필요하다. 이는 수혜국과 원조국 상호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원조국에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의 기존 ODA는 해외 봉사단 파견, 전문가 초청 연수, 정보접근센터 구축, PC 보급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실질적인 디자인 부문 ODA 모델을 통한 문화교류 및 선점 전략에 호응하는 성과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디자인 부문 ODA 모델에는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과 장기적 및 구조적으로 수혜국의 디자인 수요를 묶는 산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 시민 사회, 대학, 전문 기관 연계 강화, 사후관리 프로그램 체계화, 개발 NGO, 국제개발 학회 들 전문연구집단 육성 등 정책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장기적은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은 ODA 사업은 앞에서 살펴본 특수성으로 인해, 디자인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을 통합적 관점과 문화적 이해와 상호교류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전문화된 인력 및 조직이 요구된다. ODA를 통한 수혜국의 정보기술능력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혜국에만 편익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원조국에도 디자인 기술 표준의 확산전략과 연계하여 디자인 산업이 진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DA 모델에서 성공요인은 지속가능하고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능력을 중장기적으로 ODA 모델이 추진해야 할 주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디자인 부문 ODA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런 문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ODA 사업은 어디에서나 실시되는 단발성 사업으로 문화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 목표에 연관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수혜국의 수요와 시장 현황 및 발전 가능성과 한국의 디자인 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사고 및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접근을 했을 때 비로소 디자인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측정하고 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디자인 부문 ODA 사업들은 기초 수준의 사업들이 소규모,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전략과 유리되어 있다. 특히 국내 디자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결 고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선택과 집중 디자인 중심의 대형 사업 추진에는 여러 문제점 및 비판이 예견되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첫째, 디자인이 ODA가 지나치게 경제 논리에 예속되고 원조의 혜택이 한 나라, 한 지역에만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인도주의라는 원조의 명분과 어긋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전체의 디자인 ODA 자원을 모두 여기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 주도의 디자인 ODA는 기존의 방식에 의해서 진행하고,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관 및 자원만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혜국 중심의 원조라는 원칙에 어긋나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방식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들은 단지 디자인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술 및 디자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든 그 지역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점 지역을 선정해 한국의 디자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ODA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거점 지역을 둘러싼 훨씬 낙후된 지역공동체에는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부문 ODA의 장기적 실행 과정에서 수혜국 내부에 디자인 시장이 만들어지고,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디자인기술이 접목된다면 빠르게 디자인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따라서 원조국인 우리나라도 디자인 산업 해외진출의 가속화와 기업의 시장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지속성이 담보되면 이에 대한 수혜국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은 개도국에 새로운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다시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활성화에 함께 국가 이미지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 디자인 ODA 사업의 국제적 지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ODA 모델이 한 지역에서 또한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이 모형을 점차 타 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고,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1. 디자인 디자인산업 디자인정책 조동성, 디자인하우스, 1996.09.04.
2. 강신택, 사회 과학의 연구의 논거, 서울: 박영사, 1997
3. 박동서, 한국 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7
4. 박홍영, 일본의 ODA와 국제정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5. 정정길, 정책학 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1997
6. 최대석, 산업디자인학, 홍익대학교출판부, 1993
7. 디자인진흥기관 역할모델개발 연구 2006.12 한국디자인진흥원
8. 우홍룡, 「디자인 사고와 방법」 서울:도서출판 창미, 1996.
8. 유훈, 「행정학 원론」 서울:법문사, 1985.
10. 이경태, 「산업 정책의 이론과 현실」 서울:산업연구원, 1991.
11. 이우성, 「디자인론」 서울:대광서림, 1979.

12. 이재국, 「디자인 가치론」 청주: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5.
13. 임연웅, 「현대 디자인론」 서울:학문사 1992.
14. 정경원, 「디자인 경영」 서울:안그라피스, 1999.
14. 정경원,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서울:웅진출판, 1994.
14. 정경원, 「세계 디자인 기행」 서울:미진사, 1996.
16. 정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서울:미진사, 1980.

연구 논문

1. 디자인진흥기관 역할모델개발 연구 2006.12 한국디자인진흥원
2.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2006.8.31. 한국법제연구원
3. 권을 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6-03, 2006
4. 김태은, 정보통신 개발을 위한 ODA의 현황과 추세, 정보통신정책, 5,15, 2005
5. 김혜경, 한국의 대외원조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국제개발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미래」 토론회, 10월13일, 2005
6. 박복영,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형 원형모형의 모색, 경실련 ODA WATCH 제2차 정책포럼, 「한국형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3월 29일, 2007
7. 이태주,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인유학적 연구: ‘선진국 만들기’와 발전 담론. ” 비교문화연구 제 9집 1호
7. 유성상, 교육 ODA 추진 전략, 경실련 ODA Watch 제2차 정책포럼, 「한국형 대외원조,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3월 29일, 2007
9.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우리나라 대외원조(ODA) 정책의 개혁과제와 개선방안, 5, 28, 2003
10.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외원조(ODA)정책개선 방안, 지속위자료집 2004-24, 2004
11. 박정택, “정책 기조의 정책학적 의의와 개념 구조”, 사회과학 논문집 Vol.23, 14권 2호,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12. 한국디자인학회, “한국수출산업을 위한 산업디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 1980
13. 21세기 문화산업을 위한 공공 디자인 정책연구, 정봉금, 한국학술정보, 2007.03.10.
14. 디자인 정책 체제의 개선 방안, 정보디자인학연구, 9권, 단일호
15. 금진우, 디자인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0
1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형 IT ODA 수행모형 수립 방안

